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한국이 총체적 '위협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었다. 한국인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20년 전부터 서울 성수대교 붕괴와 바로 다음 해에 이어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지켜보아 왔다. 이후에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낸 대형 참사들을 목격해 왔다. '압축적 근대'로 일컬어지는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축적해 낸 반면 사회적 안전망의 총체적 부실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돌아보면 최근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른바 'K방역'으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들었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제 한국은 '위협사회'로부터 벗어난 것일까? 하지만,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한 '위협사회'는 단순한 사회 안전망의 발생 가능성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위협사회는 백이 '2차 근대' 혹은 '재귀적 근대화'로 일컫는 탈산업사회의 전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2차 근대는 산업화 단계의 '단순 근대' 혹은 '1차 근대'의 제 요소들이 탈산업화 단계에 이르러 자

위협사회의 백신

기부정적이거나 자기비판적으로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예컨대 '1차 근대'에서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전통적 혈연 공동체나 지연 공동체의 집단주의를 해체하고 근대적 의미의 '사회'를 형성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의 만연한 자기계발 논리('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 체제)로 드러나듯 2차 근대로 진입하면서 개인화는 오히려 자기 강화와 구속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2차 근대의 국면에서 사회는 더 이상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의 표상일 수만은 없다. 이렇듯 1차 근대의 초심으로부터 벗어난 2차 근대의 사회에 울리히 벡이 붙인 별칭이 바로 '위협사회'인 것이다.

여기서 '위협'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일상적 외래어로 쓰이는 '리스크'로 직접 옮길 때 그 뉘앙스가 더 잘 전달된다. 결국 '위협사회'란 근대적 자아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여러 선택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리스크'가 전면화되면서 그 '리스크 관리'의 임계점을 넘은 사회를 가리킨다. 한국은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받아들인 이래로 전 지구적 네트워크에 편입된 본격적인 '위협사회'가 되었다. 그 핵심적 면모는 위험의 가시적 측면으로서의 크고 작은 인명 사고들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이면에서 사회 전역에 퍼져가는 (중증 왜곡된 집단주의와 결합된) 극단적 개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 제도를 제외한 복지 제도 전반에서 서유럽에 비해 뒤떨어지는 한국에서 최근 맞닥뜨린 개인화 현상은 '사회 없는 개인'의 고립 상황을 더욱 심화하고 있

다. 예컨대 1차 근대의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보육시설 확충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회복지 제도를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은 채로 육아 문제를 전통적 방식으로 가족들(특히 아이의 조부모)의 힘을 빌려 해결해 왔다. 하지만 개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2차 근대에서 이러한 전통적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K방역'의 외면적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적 위협사회는 더욱 가속화되고 전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끌'이라는 낯뜨거운 용어로 수식되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열풍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발적 리스크 부담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지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예술과 문화는 위협사회의 수준을 알리는 또 다른 바로미터다. 한국의 예술가들이 처한 현실은 지금 어떤가? 코로나 이후 전업 예술가들과 예술 전문 인력들 다수는 현재 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위기는 특정 직업군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적 위협사회의 또 다른 징후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울리히 벡은 "2차 근대가 '정치적인 것'을 재발견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것'의 재발견은 문화예술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영끌'의 위협사회를 극복하는 정치적 힘, '개인만 있을 뿐 사회는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 개인화의 정신적 감염병에 맞서 심미적 공감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백신이 문화와 예술에 있기 때문이다.

꿈꾸는 2040



**하정호**  
위민연구원 이사  
광산군청 교육협력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육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에 대한 첫 질의 바로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는 2002년 이회창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받아들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후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대선 공약 단골 메뉴였다. 정권을 초월해 교육 거버넌스를 이루고 교육부를 개혁하지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 유은혜 장관도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교육 개혁, 내릴 수 없는 깃발을 다시 들자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지만, 야당의 반대로 설치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 여당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교총에서도 반대한다. 정부안대로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원의 지위도 지방직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 다수의 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지금 여야의 입장이 어떠한든 20년 동안이나 논의해 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는 이제 중지를 찍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대입 정책으로는 도저히 미래 교육을 설계할 수 없다. 산업화 시대의 추격자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이 아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목표가 같더라도 강남 대치동의 학생과 농산어촌 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마을의 작은 문제부터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가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점으로서 학교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창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마을의 작은 공방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것도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교원 양성 체제와 교육 과정도 바꾸어야 하고, 대입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교육 편차를 개선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20년 동안 손대지 못한 외양간이라도 이제는 고쳐 보자. 정부안 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될 일이다. 강민정 의원은 여당 중심으로 과반이 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더 긴 6년으로 하자고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또 다수의 위원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주기로 3분의 1씩 위원이 교체되도록 하자고 했다. 일부 관료들만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충분한 자료와 토론 기회를 주면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전공의 파업 당시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 의대 의사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공공 의대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서 만든 카드 뉴스였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만 받으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과정과 결과를 정당화해준 사회의 민낯이었다. 성적만으로 줄 세운 사회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노략질해 왔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 교육 개혁의 깃발을 내리려는 안 된다.

기고

공공병원 확충 왜 필요한가?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지방 의료원을 포함한 일반 진료 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 의료원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2018년 기준 한국과 유사한 사회 보험 방식을 채택한 국가와 공공 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27.2%), 독일(40.7%), 프랑스(61.5%)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심지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는 미국(21.5%)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공공병상 부족은 당장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역별 의료 편차도 매우 크다. 실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140개, 응급 의료 센터가 없는 곳은 141개, 심뇌혈관 치료 인증 병원이 없는 곳도 177개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도 서울은 3.1명, 전남은 1.7명으로 서울과 지방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심지어 전남 지역은 의사 수가 한 명이 못 되는 곳이 광양(0.85명), 영암(0.89명) 등 두 곳이나 있다. 또한 분만, 어린이 중증 질환자, 재활 치료 전문 기관도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 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

요성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쇄 및 메르스·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과 지자체의 공공 의료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병원 한 곳당 설립 비용은 고수도로 4~7km를 놓는 비용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 비용은 현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는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공공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세계가 인정하 K방역처럼 한국 보건의료의 멋진 앞날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최진수**  
전남대의대 명예교수·광주시교  
로나19 민간전문가 지원단장

우리는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든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다.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3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2-3월 대구에서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시금 생각난다. 열두 달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낀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유행을 포함한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때 우리나라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 1779 병상으로 전체의 9.6%에

社說

광주 공공의료원 애물단지 되지 않으려면

공공의료원은 필수 진료와 치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감염병 등 재난·응급 상황에서 직접 대처 및 의료기관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광주에는 이러한 공공의료원이 없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250여 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 4곳을 압축한 시는 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곧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유행 사태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신속 시엔 병원 완공까지 빨라도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신속 비용 마련도 부담이다. 시는 비용을 줄이고 공사 기간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의료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할 경우 병원 규모가 100병상(최대 150병상) 대로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병원이 주요 도심과 5km 넘게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점이 아무래도 걸린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게 될 공공의료원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개관하더라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열린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참석한 의료인들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시는 성급하게 후보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들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야 한다. 특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 4곳이 모두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신속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정부 설득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 왜 '호적'엔 안 올리나

개나 고양이 등 집안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길가에 내다버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로 전체(61만 6485가구)의 26.4%에 달한다. 네 집 가운데 한 집꼴이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가 16만 3000여 마리로 65%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고양이로 7만여 마리였다.

하지만 광주 지역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5만 마리로 전체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열 마리 중 세 마리꼴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유실·유기 사례도 크게 늘자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견주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의 참여율은 타 도시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광주와 도시 규모와 비슷한 대전의 등록 반려견은 7만 734마리에 달했고, 대구는 9만 4387마리였다. 저조한 등록률은 결국 동물 유기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도심에 버려진 동물은 2015년 1703마리에서 지난해 3557마리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 평균 열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견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애완이 아니라 진정 삶의 반려라고 여긴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을 호적에 올리듯 등록부터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동물 판매업소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을 살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無等鼓

인류가 인공지능(AI)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든 그리고 개발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든, 인공지능이 '지능 대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언젠가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해 보인다. 이른바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진화할 것이란 예기다.

지난 2016년 3월, 세계 최정상급 프로 기사인 이세돌 9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에 1대4로 패배한 뒤

슈퍼인텔리전스

는 다가올 '초지능'의 세계를 미리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로부터 5년도

중 가장 마지막 원칙은 '초지능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윤리적 이상에만 복속하도록,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지능은 말 그대로 인류의 인지능력을 훌쩍 넘어선다. 아메바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듯이, 사람이 초지능을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류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 디스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